李-朴 '당권-대권 분리' 이견 갈등 덧나나

주도권 다툼 가시화…대선가도 새 불씨

당직 인선 신경전…정면충돌 가능성

한나라당 경선 이후 수면 밑에서 진행돼 왔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양대 진영의 당내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보름 동안 이 후보 측에서 당내 화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 전 대표 측에서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오히려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당헌에서 보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측의 정면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은 4일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되 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여할 통로를 만들어놓은 것이 당헌의 취지이나 당이 대선 후보에 의해 접수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해봉 의원도 전날 이명박 후보의 친형 이상득 국회부의장과의 오찬에서 "당헌·당규를 고려하면 대권과 당권이 분리돼야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이후 한나라당 구조 전반이 이 후보 중심으로 재편돼 가는 데 대한 박 전 대표 측의 불만이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를 고리로 표면화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박 전 대표 측근 의원들의 실력행사도 현실화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근 의원으로 분류되는 엄호성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윤재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직을 제의하자 이를 고사했다.

안 원내대표가 "당 소속 부산 의원들이 정윤재 비서관 의혹을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지 않으냐"며 거듭 요청에 나섰지만 엄 의원은 끝내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 신임 당직 임명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장, 박형준, 나경원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방호 사무총장, 박계동 위원장, 강재섭 대표, 박형준, 나경원 대변인. /연합뉴스

또한, '신정아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 내정된 김재원 의원은 아예 이날 회의에 불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재원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측에 맹공을 퍼부었던 박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엄호성 의원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을 파냈던 법률지원단 소속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엄 의원 대신 안경률 의원을, 김 의원 대신 이병석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명박 후보 측은 당권과 대권 분리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당헌에서 보장한 만큼 이 후보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하며 박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권 교체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경선후폭풍 광주까지

李-朴 지지세력간 앙금…시당위원장 교체 요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후폭풍이 광주시당에까지 번지면서 광주시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박근혜 후보 조직특보를 지낸 조준성씨와 당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광주시당 명예회복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당직자의 사퇴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시당위원장 경선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과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다가 후보 경선을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에서 공천해준 자를 배신하고 이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들의 소신없는 정치행동은 호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시당위원장을 추대에 의해 선임하려다가 당원들의 반발에 막히자 이제는 최소 대의원 260명으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려 하고 있다"며 "대의원 수를 500명으로 늘리고 경선일자와 방법을 조속히 결정, 당헌 당규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번에 중앙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방호 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구례연찬회 때 광주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으나 김용갑 의원과 함께 참배를 거부했다"며 "이는 의원총회의 결의를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시대정신·역사의식의 결여를 보여준 것으로 광주·전남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중 한나라당 전 광주 서구청장 후보도 이날 광주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은 비대위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당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광주시당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헌·당규와 중앙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안재홍 위원장의 이 후보 지지선언은 시당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 광주시당의 내분은 최근 치러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간 대선후보 경선에서 양분된 지지세력간 앙금이 당권장악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후보 측 인사들이 광주시당과 지구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독식하려 하자 박 후보 측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윤재 의혹' 수사 전면확대

김상진씨 수사팀 대폭 보강…대검에 계좌추적팀 지원 요청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부산지역 건설사주 김상진(41)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4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광준 특수부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특수부 검사 3명 외에 별도로 경력 있는 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요원 3~4명을 지원받기로 했다.

계좌 추적팀은 김씨가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빼돌린 자금 380여억원 가운데 아직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157억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가운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700억원 등 행방이 묘연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투입된다.

정 차장검사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지대해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팀 보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원론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린 점으로 볼 때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포착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술신보와 신용보증 사기대출과 관련, 실무자급 5~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은 아직 소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 진척상황에 따라 언제든 소환할 수 있고, 김씨도 필요할 때 재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범위가 일단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연산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이지만 김씨가 추진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업권 보호를 위해 부산지역 군소 폭력조직인 M파 고문으로 있는 A씨를 고용해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협력업체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폭력배 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光엑스포 성공하려면

김주정
사회1부 차장

"이제 광주에서 만드는 LED(발광소자)가 휴대전화는 물론 자동차, 냉장고, 전구 등 생필품을 만드는 필수 부품이 됐습니다"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제 광산업 전시회(Photonics Korea 2007)'에서 'LG이노텍' 관계자는 광산업 제품을 활용한 휴대전화, 냉장고 등을 선보이며 '광세기(光世期)의 출발'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부스에선 광가입자망(FTTH)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했고, 'KT'는 IPTV·메가TV를 보여주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정수를 체험하게 했다. '옵테론'의 '광분배기', '글로벌광통신'의 '드라이코어 광케이블'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도 대거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광세기 창조'(Creation of the Photonics Century). 전세계 13개국 120개 업체가 220개의 부스를 설치해 광통신 부품, LED 등 반도체 광원, 광소재부품 등 400여 품목 수 천여점을 전시했고, 해외 바이어도 300여명이 몰려왔다. 국내 유일의 광(光)산업 전시회다운 규모였고, 다양한 LED조명 덕분에 화려하기까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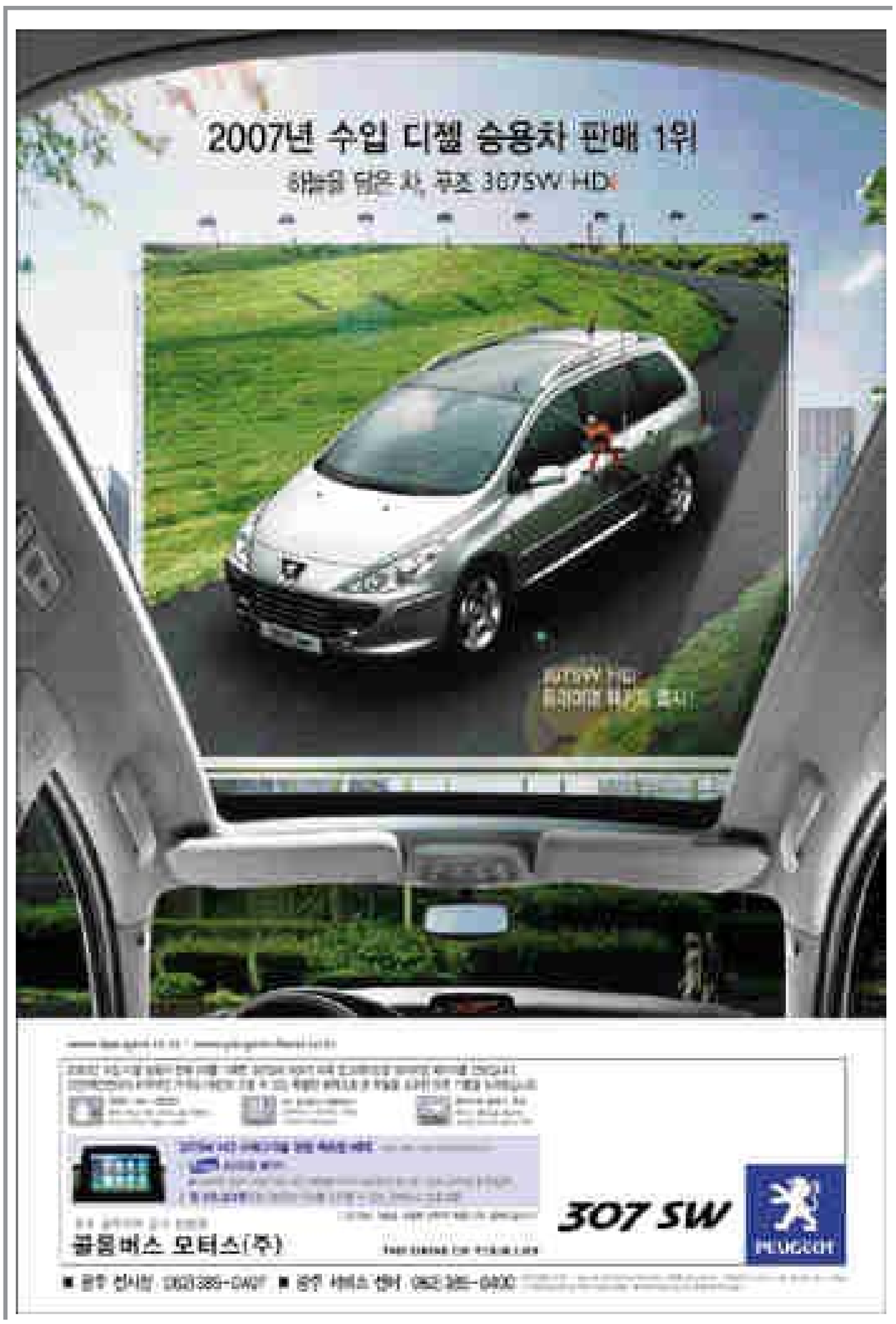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이 '광산업전시회', 나아가 '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갈수록 참가 업체가 줄고 있는데다, 광산업 자체만으로는 성장동력으로 커 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가업체는 지난 2003년 전시회와 비교할 때 163사에서 120사로 43사나 줄었다. 해외 참가 업체도 62사에서 45사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수출상담 실적도 지난 2003년 134건·977억원에서 올해는 100건·86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가 규모가 전시회의 질적 수준까지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광주'라는 지방도시의 한계가 참가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광산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광산업 3단계 사업에서 정부 지원이 줄게 되는 것도 걱정거리였다. 이번 전시회에 12개 부스의 공동관을 만들어 첨단 레이저 기술을 선보인 '무한광밸리'등 중국 광산업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기태 한국광산업진흥회장도 이날 "우리 광산업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보통신·의료·자동차·에너지·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시도해 신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정부와 업계에 동시에 주문했다.

광주시와 업계가 2009년 '광엑스포'와 '빛의 축제' 개최를 앞두고 꼭 실천해야 할 과제다.

/jjnews@kwangju.co.kr